



# 공정보도

2009-1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송동 85-1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한승호·공보위간사 김태식

www.newsunion.co.kr

## 연합뉴스, 이렇다간 국민신뢰 점점 잃는다 공보위, 공정성 시비 재발 방지대책 촉구



연합뉴스의 최근 보도에 대해 공정성의 상궤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일련의 보도와 6월15일 출고된 '박연차, 盧 전대통령 제일 먼저 거명' 기사가 자주 입방아에 올랐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간사 김태식)는 6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사안에 대한 보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3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논의 결과, "이렇다간 국민의 신뢰를 점점 잃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보도는 연합뉴스가 서거 사실에 대한 특종 이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 취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벌어진 애도 분위기 전달, 영결식 당일 장례 보도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공보위는 판단했다.

초기 분향소 분위기 보도에서는 적극적인 취재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고 애도 분위기를 전달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차분하게 다루려는 의도가 감지되기도 했다.

특히 영결식 당일 오전 보도는 기사 건수가 현격히 줄어 공보위가 편집국

장에게 공개 질의를 할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영결식날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방 조합원들이 "전날부터 회사에서 '톤 다운(Tone down)'하라거나 '드라이(Dry)하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까지 전하기도 했다. 박노황 편집국장이 "적극적인 보도 자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공보위는 조합원들의 전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관련 연합뉴스의 한글기사에 대한 단순 기사 검색에서도 서거 당일 273건이 보도된 이후 하루에 적게는 140여건, 많게는 290여건까지 출고됐으나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영결식 당일에는 106건에 그

쳤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와 관련한 보도에서는 박 전 회장이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을 제일 먼저 거명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를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한 검찰의 반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방증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 부적절했거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공보위는 외부에서 이 기사에 대해 제기한 것처럼 회사 내부의 지침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거나 검찰을 돕기 위해 고의로 쓴 '관계 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 공보위는 또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으로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가 확고해진 연합뉴스가 공정보도에 더욱 심

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빈발하는 공정성 시비에 대해 회사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와 박 전 회장 수사 보도를 총괄하고 있는 김용수 에디터(사회·지방담당)는 "영결식 당일 오전에는 기술적 판단 미스가 있었다. 기사처리가 너무 늦었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점이다"고 말했으나 노 전 대통령 보도 전반에 대해서는 "축소보도라는 지적을 받을만한 점은 없다"고 반론했다.

김 에디터는 박연차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으로서는 잘못된 것이 없고 정당한 취재활동이었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달의 참글상

## 재벌가 편법.지자체 출장비 비판보도에 참글상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간사 김태식)는 제153회 이달의 참글상(3월 송고분)에 증권부 이윤 기자의 "공시에도 재벌가 봐주기?...구멍 '송송'"을 격려상으로 선정했다.

공보위는 또 제154회 이달의 참글상(4월 송고분)에 영상 제작부 이경태·사회부 김남권 기자의 "지자체 출장비는 눈 먼 돈?...편법 여전"을 격려상으로 선정했다.

5월 송고분 참글상 추천작은 없었다.

노조와 기자협회 연합뉴스지회가 공동으로 주는 참글상 대상과 격려상에는 각각 50만원, 3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지급된다.

## “연합이 이런 회사인 줄 미처 몰랐다”

한승호 제22대 노조위원장

“우린 연합뉴스가 이런 회사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한 연합뉴스 보도 태도를 보고 근무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후배들로부터 이런 자조적인 하소연을 종종 듣습니다.

“조중동처럼 보수성향 언론사에 응시한 사람들은 애당초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그러겠거니 하겠지만 우리는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수적인 줄 몰랐다”는 것이 후배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후배들은 “친구나 가족들과 요즘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말하다 보면 창피하기까지 하다”거나 “회사를 다니기가 부끄럽다”는 얘기까지 토로했습니다.

노조 위원장으로서 지방 취재본부나 본사 각 부서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절망감’을 전해들을 때 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의 언론비평지에 최근 잇따라 등장하는 ‘편파 보도’ 지적보다도 후배들이 직접 느끼고 말하는 자

괴감은 더욱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특히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 새롭게 각광받게 된 최근에 이런 자조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배들은 과연 ‘부끄러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그토록 ‘새벽별 보기’에 ‘날밤 새우기’를 해왔던 것일까요?

결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뉴스의 선배들 중에는 어느 언론인 보다도 균형감과 합리성을 갖춘 기자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선배들은 자신있게 “우린 열심히 땀 죄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선배들은 1988년 3월 노동조합을 출범시킨 이후 곧바로 공보위를 만들어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후배들도 앞뒤 안가리고 마냥 우려스럽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선배들이 공정보도에 대한 의지조차 없다고 보는 시각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선후배

가 손잡고 ‘새로운 신뢰의 도약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보다 ‘대표 통신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뉴스통신사로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높이는 공정한 보도만이 우리의 앞날을 더욱 탄탄하게 만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연합의 선후배들은 자괴감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고민과 토론에 나서야 합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이 위촉받는 기자 생활이 아니라 능력껏 활약하고 올곧은 언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기간통신사를 넘어 팩트의 충실한 보도매체로서 우뚝 설 때만이 뉴스 수요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도 밥도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 공보위 3시간여 격론 ‘위기감..자성도’

2009년 6월 19일 저녁 ‘금연건물’ 연합뉴스 6층 노조사무실에서는 담배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격론이 벌어졌다.

3시간을 훌쩍 넘긴 ‘마라톤 회의’는 연합뉴스의 최근 보도방향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데서 시작해 보도의 적절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위기감과 자성까지 나왔다. 회사의 재발방지 촉구도 빠뜨리지 않았다.

오랜만에 보도방향을 놓고 내부 토론을 벌인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보도전반과 사회부가 출고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검찰 수사관련 보도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 연합뉴스는 제일 먼저 서거 사실을 보도한 데 이어 서울 세종로에 있는 덕수궁 분향소에도 사회부 사건팀, 사진부, 영상뉴스부 기자들이 발빠르게 취재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생중계 사안이냐’는 회사의 지적 이후 기자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진 것으로 것으로 공보위는 진단했다.

서거 보도와 관련해 현장 기자들이 선배들로부터 가장 자주 들은 말은 ‘톤 다운’과 ‘드라이’였다. 다른 보도에서도 가끔 들던 단어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선배들의 말이 톤 다운되지 않은 채 시종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사건조사-조문-장례논란-영결식으로 이어진 일련의 보도에서 기사 건수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영결식 당일이 다른 날보다 적었다.

연합뉴스는 지난 5월 23일 서거 당일 273건을 내보낸 이후 24일 165건, 25일 292건, 26일 152건, 26일 144건, 28일 123건 등을 출고했으나 발인, 화장, 영결식 등이 이어진 날에는 106건을 송고하는데 그

쳤다.

‘톤 다운’의 영향을 받은 탓일까? 일각에서는 ‘기사 건수를 늘리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면의 제약이 없는 뉴스통신으로서 ‘기사가 될 만한 사안은 모두 쓴다’는 기본 원칙마저 무시된 것으로 공보위는 판단했다.

“인터넷 매체가 생중계하듯 하니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회사 편집간부의 언급도 ‘멀티미디어 통신사’를 지향하는 연합뉴스의 모토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지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회사가 ‘노 전 대통령 관련기사를 누그러뜨리며 북한의 핵문제를 키우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들었다는 말도 전해졌으나 공보위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주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관련 현장 취재에 적극 동참했던 부산, 울산, 경남, 경기 등 기자들은 “주민들(노사모나 정당 관계자 등 정치 편향적 인물이 포함됐을 가능성 있음)이 연합을 보는 시선이 무척 거칠었다. 우려스런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지역적 특성상 ‘정치 바람’이 거세지 않은 대전지역이나 인천지역에서도 간간이 “연합의 최근 행보가 걱정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라는 전언도 있었다.

연합뉴스가 보도의 균형을 잃어간다는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박연차, 노 전 대통령 제일 먼저 거명’이라는 기사는 본래 의도와 달리 연합뉴스가 마치 검찰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으로 공보위는 판단했다.

통신기자로서 수사과정에서 취재된 ‘미공개 팩트’에 대해서는 마땅히 기사화 해야하고, 그것이 기자로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는 일임은 자명하다.

데스크가 현장 기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기사에 대해 적절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점도 언론사의 기본적인 ‘작업체계’이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해석이나 팩트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공보위 시각이다.

박 전 회장 관련 기사는 취재과정과 기사화 의도에서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간 부분은 사태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공보위는 판단했다.

더욱이 표적 수사 논란 속에서 검찰의 반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팩트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불임으로써 기사가 균형감을 잃게 됐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연합뉴스 편집국장이 ‘조선일보식이나 한겨레식 기사’를 지양하면서 객관적인 팩트보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정말 공정한 보도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공보위는 파악했다.

공보위 위원들은 이에 따라 회사가 공정보도에 대해 좀 더 의지를 갖고 재발 방지에 나섬으로써 안팎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들도 ‘자기 검열’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부당한 취재지시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무결점 기사’를 쓰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자성도 있었다.

공보위는 개정 뉴스통신진흥법에 명시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기구인 수용자권익위원회나 내부 노사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 등을 신속하게 구성하는 것도 회사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